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이 지난 20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뜻과 타고난 운명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이다. 광주은행의 타고난 운명은 지역에 '돈'을 공급하는 일이다. 광주은행의 그 업은 광주·전남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필자도 그 같은 여정을 보며 성장했다. 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은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자본금 1억5000만 원, 직원 57명으로 출발했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흐름 속에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승승장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97년말 외환 위기와 대우재(廣) 사태로 존립이 위태로워져 정부 구제 금융으로 연명하는 등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광주은행은 2014년 민영화로

지천명 맞은 광주은행, 더 박수 받으려면

(知天命)

거쳐 다시 지역 경제의 든든한 지킴이로 성장해 가고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 자 기자본 1조7000억 원(자본금 2566억 원), 총자산 27조 원(영업자산 40조 원)에 1600여 임직원이 함께하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 은행으로 성장했다. 2018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414억 원, BIS자기자본비율 16.31%, 고정 이차여신 0.51% 등으로 기초 체력도 튼튼히 다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창립 이래 첫 자생 출신 송중욱 행장이 부임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100년 은행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끝까지 시·도민과 함께 동행

이 같은 성공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반세기 동안 광주·전남 지역 사회의 묵묵한 성원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광주은행은 반평생 동반자로서 신뢰와 존중의 상생 관계를 이어 왔다.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건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이라는 슬로건은 광주은행과 지역민과의 관계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시·도민과 함께 동행을 강조한 것이다.

송중욱 행장은 5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50년 동안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늘의

광주은행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준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객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하며 "고객 중심 경영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근간으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행장의 지역민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굳건한 의지가 반갑다. 하지만 지역 향토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광주은행이 어려운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전남을 공동 운영체로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토대로 기업들이 '돈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긍지와 애항심을 높여 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역민들도 이를 성원하고 공감하는 든든한 배경이 돼야 할 것이다. 사실 지역 은행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다.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이 있음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쓰일 수 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고용 창출, 금융 인제 양성,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발생한 이익을 각종 장학·문화·체육·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익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명적 상생 관계 되새겨야

광주은행은 반세기 동안 동네 앞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시민의 친근한 이웃이었다. 9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굴직한 지역 개최 국제행사도 공식 후원을 하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이는 어느 시중 은행이나 여타 지방 은행과도 차별화되는 점이다.

공자가 정작 지천명을 자각하고 그 뜻을 실천한 것은 50세에서 18년이 지난 68세라고 한다. 광주은행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의 동반 성장 정신을 되새기고 백년해로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 역시 지역 자금을 기반인 시·도 금고 선정 등 향토 은행과 동반자로서 뜨거운 성원이 있어야겠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광주은행과 시·도민 모두가 지천명의 운명적 상생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

/lion@kwangju.co.kr

은펜칼럼

2018년 11월 11일, 진료실에서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없이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소견서를 쓴다. 대부분의 불협화음은 '의학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다.

두 번째 환자. 수술 후 보조기를 차고 있어서 한쪽 팔을 사용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구청에서 주는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니 노동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라고 한다. 수술 부위가 아직 불안정 하니 좀 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으로 소견서를 써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탁을 하는데 이 환자는 막무가내로 발급해주라며 언성을 높인다. 잘못된 구청으로부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사회적 판단'으로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육을 해대면서 나간다.

수술과 같은 치료 후 치료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부목, 보조기 등으로 움직임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직이면 그나마 덜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쉽지 않다. 머리가 아프다. 월요일 아침이 쉽지

않다. 갑자기 대기실에서 큰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인상 가득한 얼굴로 갑자기 들어온다. 원무과 직원이 진료 안내 용지를 한손으로 쥐고서 직원들이 예의가 없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며 항의한다. 자초지종을 모르니 일단 미안하다, 좀 더 사정을 알아보고 조치하겠다, 직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지만 화난 얼굴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다. "꼭 바로 하라"면서 진료실을 나가서는 대기실에서 '뭐 이런 병원이 있냐'며 또 화를 낸다. 원무과장은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일단 오전 진료 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 돌려보내고 다시 집중을 해 본다.

진료실 밖에서는 대기 순서가 바뀐다면서 언성을 높인다. 약속이 있어서 빨리 진료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또 누군가는 영상 통화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따라 아이들은 왜 이리도 많는지 온 대기실을 운동장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다. 난리도 아니다. 진료실에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환자와의 대화에 집중이 안 된다.

진료 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들어온다. 내가 오진을 했다고 한다.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내가 한 말이 틀렸더라, 큰 소리를 지르며 진료비와 검사비를 전부 돌려달라고 한다. 안정시키고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의료 기록을 다시 뒤져봐도 크게 틀릴 내용이 없다. 딱 한번 2주 약을 처방했을 뿐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내 마음도 안정이 안 된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다.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고 육신각시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온다. 환자가 신고를 해서 나를 경찰서로 연행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한다. 영장도 없이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한다.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데 대기실 모니터 뉴스에서는 지난밤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 야간 근무 의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다른 뉴스에서는 환자 사망 사고로 의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어지럽다. 갑자기 뭐가 머리끝까지 뜨겁다. 아... 꿈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월요일 아침이다. 창밖으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기고

SRF, 공론화보다 조정 기구 통해 상생 해법을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발목이 잡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있다.

필자는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주장하는 공론화는 속의형 공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속의형 공론화는 SRF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와 타협에 바탕을 둔 상생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데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제로섬 게임처럼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뿐 상생과 협력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공론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공론화 구성 원칙과 방법을 놓고 논쟁에 휩쓸릴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난방공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 나주시는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위는 혁신도시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이면 수용성 조사건 공간 범위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당사자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의 운명을 타지

역 주민이 결정하는 문제, 시간과 예산 문제,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구심, 행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문제 등 공론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속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필자는 공론화보다는 상생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이전 공공기관 대표, 법대위 대표, 노조 대표,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자.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안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하자. 법대위가 주장하는 총량 규제 부재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 안전상의 문제, 남의 지역 쓰레기 연료의 과다 반입 문제,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 참여 미흡 및 행정 책임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자. 난방공

사가 주장하는 재정적자의 문제, 매물 비용의 문제, LNG 대체 시설의 불가능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자.

이 기구에서 SRF 시설의 완전 폐쇄 안부대 한시적 부분 활용 방안, 전면 가동안에 대한 모든 대안을 설정하고 논의하자. 완전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난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 규모, 법적인 책임 문제, 손실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 부분 활용 안에 대해서도 적정 쓰레기 연료의 규모, 난방공사의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손실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자. 전면 가동 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철저한 주민 감시 체계 마련 등에 대해 검토하자.

이 모든 대안에 대해 쟁점을 객관적이 며 전문성 있게 사실 관계를 검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자. 이것이 진정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로서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출발점이다.

社說

‘어촌 뉴딜’ 대상지 낙후 전남 우선 선정해야

전국 소규모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해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하면서 전남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에서 해양수산 자원이 가장 풍부한데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어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곳을 선정, 모두 3조313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선착장 등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에 기본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해 줌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조,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주자는 취지다.

해양 레저와 국민 휴양, 수산 특화, 재생 기반 등 유형별로 나눠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한 곳당 평균 100

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첫해인 내년에는 70곳을 선정하는데 전국 54개 시군에서 143개 지구, 전남에서만 15개 시군 56개 지구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상지는 다음 달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어항 공용 시설 위주로 추진된 그동안의 어촌 개발과 달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게 되는 기반이 대가 크다. 전남은 낙후한 어촌과 어항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물이나 전기 공급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도 부족해 주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주민이 20명 미만인 30여 개 섬은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아 어선을 이용해야 하고 집단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 기반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이차렷 낙후한 전남 어촌을 대상지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계엄군이 유공자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보훈처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괄로 진압한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지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지정은 적법하며, 계엄군 가운데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 이는 송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5·18 계엄군 국가 유공자 취소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받은 답변이라고 한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송 의원은 이처럼 어이없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보훈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답변이

나올 리 없다.

더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재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지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내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유공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는 데 또 한쪽에선 유공자 지정의 적법을 말하고 있으니 보훈처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계엄군의 천인공노할 성폭행과 계엄군 국가 유공자 지정 등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다.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한 계엄군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유공자 지정 및 취소 요건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 방안을 하루빨리 발의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보훈처 내부의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본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로 흔히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를 꼽는다. 혼네는 본심,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속마음과 겉치레가 다른 일본인들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말이다.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본심과는 달리 겉으로는 예의와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의 이중성·모순성을 꼬집는 단어이기도 하다.

혼네와 다테마에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 극우 내각들의 행동이 이 같은 이중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다시금 혼네와 다테마에란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태평양전쟁 당시 호주의 다윈을 폭격한 과거사와 관련, 폭격 전몰자 추도비를 찾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과 '회해'를 강조하는 외교적인 노림수일 것이다.

반면, 1900년대 초반 자신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강경 일본도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맞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

면서 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일본의 평화헌법까지 수정하려 든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할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테마에'로 일관하며, 피해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 일본도로 '혼네'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틈타 또다시 과거 제국주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의 혼네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정 체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